2020. 7. 28. (화) 언론보도

경기일보

2020년 07월 28일 (화)
05면 자치의정

접경지 4개 시·군에 대북전단 주민감시단 운영

9월~11월… 공공일자리사업 통해 1곳당 10명씩 고용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약 3개월간 북한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감시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채용해 2인 1조로 차량순찰을 하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주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시·군에 예산 3억5천만원을 투입, 1개 지역당 10명씩 모두 40명을 고용한다.

도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고양, 김포, 파주, 포천, 연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후 도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공무원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달 19일에는 서울소재 A선교단체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도는 현재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만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주민감시단은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예산 확보와 모집 등의 절차적 단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중부일보

2020년 07월 28일 (화)
종합 03면

접경지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직접 감시

道, 4개 시·군 각 10명씩 고용

경기도 접경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이 9월부터 직접 대북전단 살포 감시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시·군에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감시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3억5천만 원을 들여 1개 시·군 당 10명씩 모두 40명을 고용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공무원이 배치돼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으나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채용해 2인 1조로 차량 순찰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을 띄우려는 등 남북 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시은기자